

## 경기도

### ▶ 양주시, 휴가철 식품안전관리 강화 홍보



양주시는 지난 7월 19일 기업인 협의회 식품분과 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식품제조 기업인들에게 식품

안전관리에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분과위원회는 오리·닭 등 축산물과 만두·안주류·한과류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34개의 회원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식품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주시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원료 및 제품보관에 주의를 요청하고 장마철에 관리되지 않은 작업장 위생관리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석명절을 맞아 많이 생산되는 제품에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식품분과위원장(주)금호물산 김광호)은 "식품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기업하기 좋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양주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양주시민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

### ▶ 닭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앞으로 닭고기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국민적 관심 품목과 소비자 우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 7월 1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소비가 많은 삼계탕(닭고기)과 오리고기 등 말복까지 유통업체, 음식점, 가공업체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8~9월 추석대비, 10~12월 양념, 김치류 등 계절,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특정지역(시, 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으로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외에도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원도

### ▶▶ 장마철 가축질병 방역관리대책 강화 추진

강원도가 2011년 장마철 잦은 강우와 태풍영향으로 인한 가축질병 다발우려가 있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 가축질병 방역관리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장마, 수해, 혹서기별 일반 방역관리 요령 및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주요 질병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요령 등의 하절기 가축관리 요령을 시·군에 시달했다.

또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로 구성된 하절기 가축진료반을 편성·운영해 농가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하절기 및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기후는 열사병, 일사병 및 모기서식증가로 소 아까바네병 및 소 유행열 등 모기매개성 질병과 돼지콜레라, 닭 뉴캐슬병, 젖소 유방염, 소 기립불능증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내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축사에 방충망 설치와 축사 내·외부 모기, 파리 등 해충을 구제하고 축사주변 및 운동장의 배수로 정비와 물웅덩이(모기 서식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울러 사료 급여통과 급수조는 가급적 자주 청소를 실시해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사료 변질여부를 자주 파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질병예방 차원에서 비타민제, 대사촉진제, 칼슘 및 소금 등의 미량 광물질을 급여하는 등 세심한 사양관리가 요구된다.

정동수 강원도청 가축방역담당관은 “축산농가는 하절기 가축 사양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환축

발견시 수의사에 진료요청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1588-4060)해야 할 것”이라며 “축사 내 외부에 대한 수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 발생방지와 사양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청남도

### ▶▶ 수해피해 복구 지원 신속 대처

충남도는 지난 7월 7일부터 8일간에 걸쳐 도내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벼 6,783ha, 수박 286ha, 멜론 59ha, 토마토 121ha, 인삼 104ha, 기타 479ha 등 총7,832ha의 농작물 침수피해와 닭 12만7천수 등 가축 13만5천마리 폐사, 농경지 유실·매몰 149ha, 농업시설(비닐하우스) 1.1ha, 수리시설 197개소가 파손·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충남도는 침수 논에 대해서는 퇴수조치하고, 재생 불가능한 시설하우스내 부산물 및 비닐 멀칭제거 조치, 폐사축 매몰 등의 응급복구는 완료했으나 유실매몰 농경지, 수리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로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국비지원 도달기간을 감안, 우선적으로 도 및 시·군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복구비는 대파대 기준으로 1ha당 ▲무·배추 110만원 ▲과채류 196만원 ▲인삼 752만5천

원이 지급되며, 피해율이 50% 이상 농가에게는 생계지원비 77만3천원과 농축산경영안전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가 감면된다.

또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시설이 협소하고 제진기가 설치되지 않은 178개 배수장에 대한 개선사업을 위해 4,611억원을 지원 건의하는 등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아산시, AI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면제

아산시는 구제역, 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지난해 발생해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등의 여파로 아산시는 염치읍 2농가 등 10개 읍·면·동에서 34농가가 살처분 피해를 보았으며, 약 2만1천여두의 소·돼지가 살처분 되었고, 닭·오리알 등 약 80만개가 폐기됐다.

시는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올해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가족이 매장된 매몰지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피해농가의 축사, 축사부속 토지, 매몰지 등으로 올해 면제되는 재산세는 약 1천9백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 연기군, 여름철 가축사양관리 지도 강화

연기군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함에 따라 하절기 가축사양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더위에 약한 닭 사육농가에서는 30℃ 이상일 경우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천만원을 들여 고온에 효과가 있는 사료첨가제를 15농가에 지원했다.

## 충청북도

### ▶▶ 충북산 무항생제축산물 서울시 학교급식서 인기

충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축산물이 서울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물 서울시 학교급식 사업이 6월 말 현재 150톤에 15억원에 이르는 등 전년 동기의 33톤, 2억5천만 원보다 월등한 신장세를 보이는 등 결실을 보고 있다.

또 품목의 다변화도 이루어져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 한우, 육우고기까지도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축산물 공급량이 총 136톤, 10억 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돼지 133톤, 한우 5톤, 닭 7톤, 육우 5톤 총 150톤으로 급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확대는 지난해 3월 서울시 학교급식 전담기구인 농수산물관사 강서친환경유통센터가 준공돼 충북 무항생제 돼지고기 2톤이 시범적으로 공급됐고, 학교 영양교사, 학교장 등 초청행사를 통해 월 공급량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초만 해도 월 10톤 이내이던 공급량을 이제 월 35톤씩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62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여 올해에는 320여개로 확대돼 공급량을 월 50톤으로 늘려 목표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한우와 육우고기 물량도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현공를 충북도 축산과장은 “지난해 학교급식 결과 친환경축산물을 이용한 초등학교생들에 대한 아토피 개선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앞으로 1천270개 초·중·고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친환경축산물 공급시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경상남도

### ▶▶ 한우·닭 사육수 증가

경남에서 사육되는 가축들 가운데 한우와 닭은 늘어난 반면 돼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3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2분기 경남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육우는 모두 32만6천마리로 전분기(31만1천마리) 보다 1만5천 마리(4.8%)가 늘었다.

이는 송아지 생산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출하가 지연된 때문이라고 동남통계청은 분석했다.

닭(육계)은 537만 마리로 전분기(337만2천마리) 보다 199만8천 마리(59.3%)나 증가했다.

삼복 등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입식을 많이 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반면에 돼지는 전분기(113만7천마리) 보다 1만 마리(0.9%)가 줄어든 112만7천 마리로 집계됐다.

구제역 여파로 돼지들이 살처분되는데 최근 돼지 가격의 상승으로 도축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 ▶▶ 창원시,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실시



경남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누전과 같은 농가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축종별 단체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고온과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축사시설의 냉방기 사용 증가와 습한 전기시설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사전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소와 돼지는 전 농가, 닭은 1천수 이상 사육 농가다.

또 이번 점검에서 누전차단기와 같은 전기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농가는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 및 시설개선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농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 사양관리 특별 지도반을 편성, 축종별 사양관리 지도와 가축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 농가의 가축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경상북도

### ▶▶ '가축 폭염피해 예방대책' 수립

경북도는 최근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에 나섰다.

지난 7월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온이 30℃ 이상 지속될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등 일정 공간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쳐 폐사에 이르는 등 가축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원한 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 공급을 당부했다.

도는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가축 사양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 발생시 축사 및 가축관리요령 대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가축 폐사 등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선다.

특히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부를 적정 온도(25℃) 이하로 낮춰 가축들이 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열사병 등 질병에 의한 폐사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

가축은 고온한계점 한우·닭 30℃, 젖소·돼지 27℃ 이상이 되면 대사가 빨라져 체온이 급격히 올라 열사 우려가 높아 정상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충분한 통풍과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고 분노는 조기에 제거, 유해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고온으로 인해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해 깨끗하고 시원한 물, 소금, 비타민과 광물질을 충분히 공급해줘 가축의 기립 불능증, 열사병 등을 막아야 한다.

## 전라남도

### ▶▶ AI 예방위해 축산 환경 진단 필요 강조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월 11일 “닭·오리 등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축산농가 점검을 통해 환경 적합 여부를 판단,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사업소 및 출연기관 간담회를 갖고 “호수거나 강은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이 되는 곳이므로 그 주변에는 오리 등 사육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축산농가 점검을 통해 밀식 여부나 환경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토록 하거나 폐쇄토록 해 특정 농가 때문에 대다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 농가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와 사료 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어 먹이를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먹이를 철새들이 주워먹다 질병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며 “축산농가에 겨울에는 축사에 먹이를 두고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 ▶▶ 나주시 AI항체 발견, 예방적 살처분 실시

전남 나주의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가 발견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다.

전남도는 지난 7월 25일 “최근 나주시 동강면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H5형 AI 항체가 검출돼 이 농기에서 기르던 오리 4천4백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AI 항체는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 몸속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일종의 면역체로, 병원성으로 전이가 가능한 H5·H7형 AI 항체가 발견된 것은 전남에서 올들어 처음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기마다 이뤄지는 예찰활동 과정에서 항체를 발견했다”며 “바이러스가 아니라 면역항체로, 당장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해당 농가의 오리도 살처분했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

### ▶▶ '여름철 보양식' 닭·오리 사육 급증

2/4분기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육하는 가축 가운데 여름철 보양식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닭과 오리 사육마릿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전남지역의 닭 사육 마릿수는 2천304만마리로 3개월 전보다 73.4%, 1년 전보다 7.8% 각각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는 44만7천마리로 3개월 전보다 126.6% 증가, 1년 전보다 27.3% 감소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의 오리 사육마릿수는 683만마리로 3개월 전보다 142.2% 증가했다.

이처럼 닭과 오리 사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이 불가능해 임시 휴업했던 농가에서 입식을 재개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전라북도

### ▶▶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전북도는 그 동안 구제역 차단방역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2011년도 사육단계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문컨설팅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작업장(식육 판매업, 식육보관업, 운반업 등)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축종별 사육단계 축산농가를 지원키로 하고 지원자격을 갖춘 74개 농가를 선정했다.

사업추진에 선정된 컨설팅업체와 업체에 배정된 축산농가간 계약체결, 컨설팅 지도, 지정신청, 인증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농가당 사업비 8백만원 중 6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추진한다.

축종별 농가로는 총 74개 농가 중 한우 40농가, 닭 13농가, 돼지 12농가, 오리 6농가, 젓소 3농가로 구성된다.

전북도는 이번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국 대비 인증률을 높이고 청정전북 축산물생산기반을 마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